

“국민의 분노, 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으로”

문 대통령,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우리 정부가 다 할 순 없지만, 첫 단추는 제대로 채워야
공직사회부터 철저히 차단... 재산등록제 공공직자 확대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제도화... 공직자 부패 원천 차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에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큰

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누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을 때때로 드러냈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



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개발방지책의 민첩한 시행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 관련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이익 방안 마련 계획 등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LH 투기 사건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나무 등을 심어 보상금을 늘린 수법에 대해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수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받질수 없을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에너지 지원 제도적 미비”

두세훈 도의원,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농산경제위원회)은 의회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자인 두 의원은 “도내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공청회 배경과 에너지 미공급지역 실태조사,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국민이 살기 위한 적정 온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 의료비로 세금 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도민의 에너지 복지는 구조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본부 김효순 회장은 “조례에 구체적 예산 확보 및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두세훈 의원은 “공청회에서 주요쟁점이 된 에너지복지위원회, 실태조사 실시의견,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해 도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속 시름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 에너지 복지 선진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보궐선거 투표소 9곳 확정

도선관위, 김제시의원 보궐 관련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제시나선거구) 투표소 9곳을 확정했다.
또한,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12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곳 모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다만,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학교 수업 등의 사유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투표소 2곳은 부득이하게 장소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또한, 29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기재돼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내부패 퇴치의 시작, 국회의원·지방의원 특권 줄이기”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가 29일 전북도청에서 ‘코로나시대 상생’을 위한 이 익공유와 내부패 퇴치의 시작은 국회의원·지방의원 특권 줄이기부터’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 배제 운동을 전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호상 기자

최영심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질적 저하 우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 대상이 확대되며, 도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예산 중 일부가 차량 개조 비용 사용에 집중되는 등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교육위원회·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도로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 법적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됐다”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 역시 법이 시행되는 5월 27일 이전까지 차량 도색 등 차량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설들의 경우, 이미 소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개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는 기존에 지원하던 프로그램비의 일부를 올해에 한해 차량 개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최 의원은 “급변 차량 개조비의 경우, 관련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에 한해 집행되는 예산인데도 전북도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 증액 없이 기존 프로그램비 일부를 사용토록 조치했다”며 “이는 아랫돌 빼서윗돌과는 타산행정의 전형적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영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조속히 프로그램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서울·부산 재보궐 지원 총력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당 차원의 선거운동에서 실효성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공신선거활동이 시작된 직후, 고창과 정읍의 권리당원들이 서울과 부산의 ‘연고자 찾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와 SNS 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정읍시의원과 고창군의원, 당직자들이 직접 상경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위원장과 함께 현장유세 등에 동참하면서 박영선 후보 캠프의 막판 뒤집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유호상 기자

주차대행업체 고객차량 무단사용 처벌 강화

남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항공기·선박·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 사용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차대행업체나 자동차 수리센터의 직원이 고객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는데도,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의 불법사용을 규정하는 형법 제331

조2의 ‘권리자의 동의없이’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로 바꾸면서 불법 사용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도록 했다. 또, 선박·항공기의 불법사용과 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사용을 다루는 조문을 분리함으로써 양형기준을 정비했다.
신영대 의원은 “주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로 생업 포기 소상공 재창업 채무조정 시 우대 지원 가능해지나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생업을 포기한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면 채무조정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다시 재기하려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 지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수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무 여파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막대한 채무부담은 코로나19 중식 이후, 영세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민주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

응 실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발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대다수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또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사회로 전환 시기는 역할에 마중물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가

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실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화산예방접종센터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 의원)가 29일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될 화산체육관 소재 화산예방접종센터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서난이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화산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꼼꼼히 현장을 둘러보며 운영 계획 및 시설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일상 회합의 첫걸음인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